

투데이칼럼

부안에 마실 오실 손님 군민 모두가 정성으로 맞이하자

천(天), 지(地), 인(人)의 조화로운 축복의 땅에서 살아 가는 부안 사람들이 펼치는 제5회 오복마실축제가 부안에서 생산되는 오만 것들이 모여드는 부안읍을 중심으로 한 거리형 축제



이명중 부안군 계획국장

소박한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 내 집 주변과 상가, 거리 주변 청소를 좀 더 깨끗이 하고 공중화장실 에티켓, 모든 업소의 단정한 복장, 바가지요금 근절과 가격 표시제 실시, 보이지 않는 배려

관광안내도에 좀 더 힘써 한 눈에 들어오고 찾기 쉬운 부안지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군민이 주인공으로 참여해 찾아오시는 손님, 잠시 들리는 손님, 모두 한바탕 즐기다 갈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자.

들도록 하자. 더욱이 이런 축제를 통해 우리지역의 특색을 맘껏 뽐내며 자연스레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과 그로 인한 다양한 연계효과와 파급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큰 돈을 들여 축제를 준비하기 보다는 우리 부안군민의 자긍심과 정성과 마음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부안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웃으며 외지손님을 맞이하면 입고 있는 옷도 품위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우리 부안군민은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축제기간 동안 즐거움으로 손님을 맞이해 외지의 방문 손님이 단 하루라도 1일 주인이 되도록 하고 주인이 전면에 나서 축제를 치러내면 그보다 더 부듯한 자랑스럽고 행복한 부안 사람이 아닐까 한다.

독자제언

꽃으로도 때리면 안되는 자녀학대 이제 그만

미성년인 아이를 키우는 부모 넷 중 한 명이 최근 1년 동안 자녀를 학대한 경험이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3년 조사 때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2014년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권권자를 포함한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를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부모의 아동학대 사례가 전체 중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여전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비중이 높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인데 사망한 아이들 중 대부분이 사망 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에 시달려왔다.

자녀학대에는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인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에게 욕을 하는 행동들도 아동학대이다.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이러한 정서적 학대로 시작되지만 정서적 학대는 처벌대상에 속하지 않아 부모에게 교육이나 상담 같은 처벌마저도 내려지지 않는다. 어떠한 조치 없이 피해 아동들이 학대 후에도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신체적·정서적 학대 모두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 외관상 상처는 물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에 시달릴 수 있다.

더 이상 '교육차원으로 그럴 수 있지' 하며 우습게 넘길 일이 아니다.

급증한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학대가 더 이상 은밀하게 이뤄지지 않아 반감기도 하지만 그만큼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어서 씁쓸하다. 부모는 누구보다도 아이를 아껴주고 보호해줘야 할 존재이다.

하루빨리 자녀학대가 근절되어 더 이상 아이들이 부모의 학대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길 바란다.

김소정 경찰경찰서 흥덕파출소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하이패스 진입로' 서행하세요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로 이용하는 차량이 10대 중 7대 꼴로 늘어난 가운데 해당 차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하이패스 요금소로 진입하는 순간 도로 폭이 갑자기 좁아지는 곳이 많아 주의가 요구되지만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국도로공사의 '2012~2016년 전국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 사고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이패스 차로에서 사고 198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71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매년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하이패스 차로 사고의 원인은 전방 주시태만과 과속, 졸음운전 등으로 대부분 운전자 과실이지만, 현 차로의 구조적인 문제도 사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관련 법상 고속도로의 차로 폭은 최소 3.5로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전국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 1266곳 중 진입로 폭이 3.5m 이상인 곳은 406곳(32%)에 불과하다. 하이패스가 완전 개통된 2007년 이후 설치된 톨게이트는 이 기준에 맞춰 시공하지만 이전 톨게이트는 기존 진입로에 하이패스

시스템만 설치했다.

또 다른 문제는 유명무실해진 제한 속도 규정이다. 하이패스 진입 제한 속도는 2010년 9월 경찰청장 고시에 따라 시속 30km 이하로 정했지만 관련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도로교통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통과한 전체 차량의 평균 속도는 49.8km/h이고, 85%는 규정의 두 배가 넘는 평균 66km/h의 속도로 통과했다고 한다.

차로 확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진입로 규정 속도라도 지키도록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의 홍보와 국민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제한속도를 높이지는 복소리가 나오지만 현재 차폭을 고려할 때 이는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2020년 전국적으로 시행될 '스마트 톨링'(무인요금징수시스템) 시행 전까지는 규정 속도를 지키려는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 제한 표지, 차로 유도선 등 안전시설이 꾸준히 보완된 환경 개선과 하이패스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종진 고속도로순찰대제9지구대경장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사설

전북도의 내년 예산 확보 총력전

전북도가 예산 확보를 위한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전북도더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지 궁금하다고 했던 걸 생각하면 그때와 지금의 분위기는 확연히 다르다. 송하진 지사와 김일재 행정부지사와 진흥 정무부지사 등 전체 사령탑이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애쓰는 모습을 연일 보여주고 있는 까닭이다. 그것은 확실히 두드러져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료들만이 아니라 국과장과 사무관 등 실무자들을 만나서 전북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말한 것은 크게 평가할 일이다.

새로운 정부는 어쩔지 모르지만 대선 때까지 국가를 책임져야 할 황교안 정부는 집권 박근혜 정부의 안을 그대로 따를 모양이다. 광역 시도 지자체에게 재정 건정성 확보를 말하면서 살림살이 방식에 간섭하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 다들 알고 있는 대로 전북의 재정건정성은 예나 지금이나 높은 점수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도 도민들의 정서는 전북도의 입장을 살펴줄 마음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예산을 타내 지역을 속히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도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전북도의 예산확보 총력전은 반드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역대 정부들이 국가예산 배분과 관련해 공평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말해야 한다. 국책사업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있음에도 실상은 그러저 못한 새만금을 똑바로 보자는 것이다. 백년 먹거리 사업이라는 탄소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내년에는 7조원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야 한다. 그것도 도민의 기대에 맞을 정도로 열어야 한다. 간신히 7조원을 넘기는 턱걸이 수 준이려면 반감지 않다. 그것은 또 다시 4년 연속 7조원 시대가 보여 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분발해야 한다. 전북도는 4년 연속 6조 원 시대를 자랑처럼 말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쓸쓸할 뿐이다. 전국 최하위의 증가율 성적표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예산과 달리 전북도의 사령탑 전원이 기재부 등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음은 매우 잘하는 일이다. 도지사과 행정부지사의 정무 부지사의 예산 확보를 위한 행보에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정부 신규사업 억제 방침 맞대응해야

전북도는 신규 발전 현안에도 주목해야겠다. 추진을 위해서 논리 강화 작업에도 들어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역 발전을 약속한 사업들이 오래도록 소외된 채로 있는데 도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속도감 있는 작업이 없기

세월만 흘러 보내서는 안 된다. 지난날 그것을 여러 번 주문했던 것을 여기 또 반복하는 것은 그래서이다. 그런데 지금 전북도는 긴장해야겠다. 정부가 각 광역시도 지자체의 신규 사업을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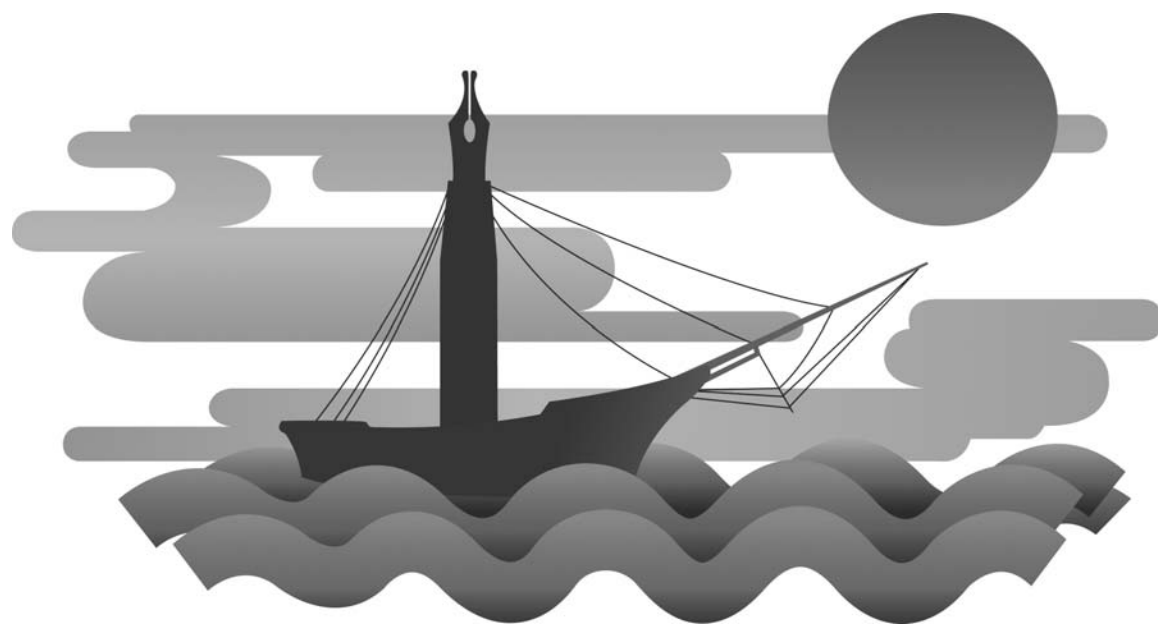
신규 현안 사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최근에 도지사와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가 기재부를 방문하는 등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행보를 미리 보여준 까닭이다. 무슨 현안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지역 발전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지역 발전을 이끌어주려라는 새만금 사업과 탄소산업과 식품 클러스터 사업들을 보이도 그렇다. 전북도가 수년전부터 속도를 내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

부의 지원은 미달지 않다. 그래서 무슨 일이고 실적을 구체적인 움직임이 약하면 예산 확보는 무망하다.

전북도는 소외된 신규 현안 사업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역량을 온전히 발휘를 해야 한다. 그래서 뭔가 실적을 보여줘야 한다. 지역 발전의 주목적은 지역 경제와 살림살이의 발전이다. 전북도는 정말이지 뭘가를 보여줘야 한다. 도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큰 데 매번 그에 못 미치니 섭섭하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예산증액을 위해 체크할 것은 미리 체크 해둬야 한다. 그동안 소외된 신규 발전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려면 그래야 한다.

전북도는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뒤처지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려면 전북도는 끈덕지게 설득작업을 벌여 나가야 한다. 도민들은 올해 전북도에 기대하는 것이 크다. 기대에 부응해 신규사업들도 추진시키는 실력을 보여주기 당부하는 바이다.

용 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